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 순 영*

초 록

본 논문은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현행 법(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들 법(안)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는 현행 사회보장법 체계, 즉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 관련법 등을 대상으로 이주민, 특히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지원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사회보장법체계에서 국적 취득 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외국인 특례조항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지원은 실태조사나 NGO단체들로부터 이주민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된 급여와 서비스들이 관련 법률에서 체계성 없이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들은 가족 중심주의를 전제로한 것이었다. 사회보험과 관련한 법들에서는 내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보호 권리가 발생하며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 관련 법들에서는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현행 사회보장법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민자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독자적인 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안)'과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두 법(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법(안)은 이주민 가족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주민의 문제를 가족 정책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기조가 강하여 다문화의 주체인 개인의 권리 보호가 결여되었고,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면서도 서비스 지원에서 그러한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두 법(안)이 서로 조정되어 '다문화의 개개 주체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이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하나의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다문화사회, 국제결혼, 국제결혼 여성이주민, 사회적 지원, 사회보장법,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안)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I. 서론

세계화가 지구 어느 곳에서나 빈번히 이루어지는,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의 하나가 되면서 국가 간 이주가 ‘상시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2004년 UN의 발표에 의하면 1억 8천5백만 명 내지 1억 9천2백만 명의 사람들이 2005년에 국경을 넘어 이주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UN, 2004). 이 국가 간 노동이동에 있어 최근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주의 여성화(feminized migration)이다¹⁾. 과거 국가 간에 행하여진 노동이동에 있어 여성이 주로 고국에 남겨지거나 남편과 가족을 따라 수동적으로 이동하였던 것과 달리 요즘은 여성들이 간호사(간병인), 가정부, 연예인, 그리고 혼인 등의 형태로 이동의 주체가 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여성이 전 세계 이주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필리핀과 스리랑카와 같은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이 타 국가로 이주하여 가는 수치가 남성 이주자 수를 앞지르고 있다(IOM 2003a:6, Jolly 2003).

한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입국 외국인인 518만명 가량으로 1995년 292만명에 비해 약 77.2%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입국 증가율은 크게 차이를 보인다. 같은 기간 동안에 남성입국은 1995년 202만명에서 2005년 291만명으로 44.3% 증가한데 비하여 여성은 1995년 91만명에서 2005년 227만명으로 150%가 증가하여 여성의 이주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http://kosis.ngo.gokr>).

한국에서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는 특정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5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자료를 살펴보면, 입국 외국인에게 발급된 비자유형을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수를 보이는 체류자격은 ‘예술홍행(E-6), 방문동거(F-1)와 배우자(F-1-2), 거주(F-2)의 국민배우자(F-2-1)과 영주배우자(F-2-3)²⁾’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주

1) 노동이동의 여성화 현상은 국가 간 이주자의 50%이상이 여성이라는 것으로 과거 국가 간 노동이동에 있어 여성은 고국에 남겨지거나 남편을 따라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자라는 선입견과 달리 여성이 이동의 주체라는 사실을 부각하여 사용하는 용어임.

2) 주요 이주민 국적 및 체류자격별 입국현황의 성별 비교

가 성산업 관련 취업이나 결혼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가운데서도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성매매에 대한 규제에 따라 성산업과 관련된 이주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³⁾ 비해 결혼을 통한 여성이주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드문 현상(총 혼인의 1.2%에 불과)이었지만 지금은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건수의 13.6%(2005년)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적인 결혼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한국여성보다는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건수는 1990년 4,091건(동년 혼인의 1.0%)에서 2005년 11,941건(동년 총 혼인건수의 3.8%)으로 2.9배 증가한 반면에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619건(동년 총 혼인건수의 0.2%)에서 31,180건(동년 총 혼인건수의 9.9%)으로 50배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이는 2000년을 기점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통계청 각 연도).

전 세계가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더욱 더 좁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족과 국적의 구분이 없이 진행되는 결혼은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한 보고서는 2010년 무렵에 우리나라 국민결혼 5쌍 중의 1쌍이 국제결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문화에 대한 신화를 가져왔던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가정에서 한국 남편들의 제3세계 여성 배우자에 대한 횡포와 학대, 인권유린의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국가 위상이 저하되고 국제결혼 여성들의 출

(2005년 현황, 단위: 명)

체류자격 구분	산업 연수 (D-3)	연수 취업 (E-8)	예술 홍행 (E-6)	호텔 유흥 (E-6-2)	비전문 취업 (E-9)	방문 동거 (F-1)	배우자 (F-1-2)	거주 (F-2)	국민 배우자 (F-2-1)	영주 배우자 (F-2-3)
합계	63,340	60,337	1,430	2,827	59,902	34,704	835	10,813	74,176	278
남성	52,032	53,184	344	575	40,611	16,164	22	5,397	8,330	20
여성	11,308	7,153	1,086	2,252	19,291	18,540	813	5,416	65,846	258

출처: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2005년 출입국관리통계연보」에서 재구성, 2006년

3)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000년 초기 연예인 비자(E-6)로 들어와 서비스에 종사하였던 이들이 약 5000~7,000명이었던 것에서 2005년에는 E-6, E-6-1, E-6-2로 들어오는 여성의 수가 3,324명으로 줄어들었다(법무부 출입국관리국 「2005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신국과 외교적 마찰까지 유발되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국제결혼 여성 이주민의 사회통합이 우리 사회의 핫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법과 법(안)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들을 짚어 보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법체계는 내국민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권리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⁴⁾과 현재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다문화 가족지원법(안) 및 이주민 가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안)으로 한정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법률(안)에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지위와 권리, 사회적 지원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 진단이나 미 충족된 욕구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등에 대한 연구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혼인이주에 관한 선행연구와, 혼인이주한 여성들이 가정 및 사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 가를 이차 자료 (통계청과 법무부의 통계자료,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례연구발표 등)를 활용하여 살펴본다.

II. 국제결혼 이주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기존 연구의 검토

여성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노동력의 국제이주 목적지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력을 내포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의

4) 사회복지법의 정의를 광의로 하느냐, 협의로 하느냐에 따라 법률로 들어갈 수 있는 경계가 달라진다. 광의로 보게되면 사회복지법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고용, 보건, 주택, 교육 등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지원하는 법률)들이 되고, 협의로 정의하게 되면, 주로 공공부조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들만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법의 범위를 정하지만 사회복지관련법(고용, 보건, 주택, 교육)들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법률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이 사회복지관련법의 경계로 들어오게 되고, 법제처의 분류에서도 사회복지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들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예컨대 미국에서 페미니스트들이 1970년대와 80년대 이주연구에서 여성이 부재한 것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면서 여성을 ‘첨가 혹은 혼합’, ‘오직 여성만’을 위한 연구로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이주 여성을 다른 사회구조와 교차되는 다변화하는 시스템과 연결하여 보기 보다는 고립된 구조로 해석하고, 성별이 하나의 사회시스템으로써 모든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이주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Hondagneu-Sotelo, 2003:6~7).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의 연구들은 성별이 사회적 실천으로써 이주양상을 형성시킨다는 관점으로 여성 이주민들이 이주국가에서 다양한 노동경험, 사회네트워크 경험, 새로운 사회적 위치로 인한 상호작용 등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가족구성원 내의 성별관계를 더욱 평등주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1990년대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비단 가족구조내에서나 커뮤니티들만이 아닌 모든 영역- 일일 환경, 노동수요, 시민권 개념, 이주정치, 공적의견, 이주정책, 난민정책, 지역행위자 소비현장, 매체 그리고 계층, 인종, 민족, 국가 등-과 같은 성별의 연결 교차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이어졌다. 예를 들어 미국 내의 이스라엘 유태인과 러시아 유태인들의 성별에 따른 민족 정체성의 재구성, 미국내 동일 집단에 속한 여성들이 본국 내 계층 구별에 따라 딸에 대한 상이한 성교육, 필리핀 남녀의 확실한 성별 노동 분업, 여성전문 인력의 위치가 이주에 주는 영향등 이주에 따라 재구성되는 모든 영역 내의 과정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Hondagneu-Sotelo, 2003:1~59).

이주 여성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축적된 것에 비해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는 여성이 남편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이주자(tied-movers)로 이해되어 여성의 혼인이주 (marriage migration)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설동훈 외(2005)와 이해경(2005)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국제결혼의 등장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 번째 유형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인 남성들이 몇 장의 고국 여성들 사진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자신의 배우자로 미국본토나 하와이로 초청하여 이주하게 된 ‘사진신부(picture brides)’이다(Schaeffer-Grabel,

2003; 177~178; 이해경, 2005 재인용). 그러나 이 유형은 국가를 건너간 국제결혼이기는 하지만 같은 인종간의 결혼이었고 최근에도 해외 이주민 사회에서 주로 남성이주민들이 고국에서 신붓감을 찾는 현상으로 지속되고 있다 (Thai, 2002).

두 번째 유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신부(war brides, military brides)’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한국, 필리핀 등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이들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여성이 이주하였던 것으로 인종간 국제결혼의 형태이다. 이 유형은 여성들의 나라에서 기지촌 매춘여성의 결혼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주가 아니라 가족 재결합을 위하여 남편을 따라 가는 자(tied-movers)의 이주로 간주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서구에서 1970년대 이후 여성의 국가 간 이주를 부추기는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우편주문신부(mail order brides)’이다. 이 유형은 상업성을 띄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주문신부(internet order brides)’ 또는 ‘사이버 주문신부(cyber order brides)’라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이주여성들은 일부 메스컴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여성주의 학자들로부터 제3세계 여성들이 경제적 동기나 이주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위장 결혼자’로, 상업화된 중개업자들의 개입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희생자’로, 또는 국제적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묘사되기도 한다(O’Rourke, 2002; Perez, 2003 등).

그러나 국제결혼 여성 이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주의 주체자로서 여성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사이몬스(Simons, 2001)는 국제결혼을 페미니즘의 발달과 연계하여 설명하는데, 그는 국제결혼을 페미니즘의 발전에 따라 여성은 페미니즘이 발달한 ‘남녀 평등한 사회’에서, 남성은 페미니즘이 덜 발달한 ‘남녀 불평등한 사회’에서 배우자를 찾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샤퍼-그라비엘(Schaffer-Grabial, 2003)은 중남미 여성 사례를 통해 우편주문신부가 단순히 하층계급출신의 희생자가 아니라 중간계층 여성들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에서도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 이주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군병사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 국제결혼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유형이다⁵⁾. 여기서 국제결혼 여성들은 미국 기지촌 주변에서 가정을 꾸려 생활하거나 주로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래서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이들의 적응을 다루는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한인 여성들이 하류층 이거나 기지촌출신 여성이고 여기에 언어와 문화적 차이까지 겹쳐서 미국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송성자, 1974; 박종삼, 1983; Kim, 1972, 1977; Lee, 1981). 그러나 최근 한 연구논문에서 미군아내인 한인 여성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기지촌과 아무 관련이 없고, 이들도 다른 일반 미국교포와 다른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춘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미국사회와 교포사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발표되었다(Yuh, Ji-Yeon, 2002).

두 번째 유형은 외국인 남성 전문직 종사자와 한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1980년대 이후 현상이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신장되자 외국인의 국내유입과 한국인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의 유형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유형은 수도 많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계층에서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다.

세 번째 유형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1990년대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이 유형은 국내로의 대거 혼인이주자를 증가시켰고,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이슈들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들이 시작되도록 만들었다. 이 부분의 연구는 아직까지는 이주여성 지원 단체들과 특정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외 풍부한 사례연구를 다룬 학계의 연구논문이 몇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주여성 지원 단체들의 발표나 연구는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 현황(이금연, 2003; 최근정, 2003; 석원정, 2004)과 국제결혼 여성들이

5)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여성의 수는 1950년대 20, 20, 80, 150명씩 해마다 늘어나 1960년대는 연평균 2천명씩,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연평균 4천명정도이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02년 8월 19일자)

한국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주 여성들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의 사례(광주여성발전센터, 2003; 위홈, 2003)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나 보고는 주로 문제가 있는 내담자를 중심으로 파악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사회 국제결혼의 일반적 현상으로 객관화하기는 어렵다.

충남도(2005), 경기도(2007), 천안시(2007) 등의 각 지방단체들도 시 및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연구들도 천안시나 충청남도처럼 출신국가, 자녀 수, 직업, 가족형태 등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수집하는 실태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국제결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경기도⁶⁾ 만이 국제결혼 여성이주민 뿐만 아니라 남성이주민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과정,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자녀양육 및 부모-자녀와의 관계, 사회생활과 경제활동, 복지실태와 서비스 욕구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중장기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국적 수준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는 2005년에 설동훈 외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조사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 방안』과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설동훈 외(2006)가 대상 범위를 국제결혼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확대하여 조사한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가 있다. 후자는 전자의 조사내용이었던 국제결혼 과정, 경제활동, 결혼생활, 빈곤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욕구, 그리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욕구 조사에 더하여 국제결혼의 동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 2006년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와 사회정책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학계에서는 주로 인류학 쪽에서 김민정(2003)과 윤형숙(2004a; 2004b)의 연구가 있고, 다수의 석사논문들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을 내놓

6) 전국 국제결혼 건수 중 경기도 내 국제결혼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23.1%로 비교적 큼.

고 있다. 학계의 연구들은 수개월 이상 혼인이주자나 그 가정,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참여·관찰한 풍부한 사례들을 통하여 이들의 한국생활을 전하고 있다⁷⁾. 그 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 및 가족들에게 필요한 복지프로그램들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로 광주 전남의 외국인 주부의 인권보호와 복지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한 양철호 외(2003)의 연구,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을 분석한 정은희(2004)의 연구가 있다.

2. 국제결혼 여성 이주민들이 한국생활 적응에서 겪는 문제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정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비율이 급증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에 이들에 대한 복지욕구를 조사한 연구는 아직은 미미하다. 단지 사례를 다룬 몇 편의 연구논문과 국제결혼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상담 자료나 홍보 및 세미나 발표 자료,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과 사회적 욕구들을 추론할 수 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강원도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조사한 강유진(1999)의 연구에서는 ‘생활습성, 언어장벽 등 문화적 차이’(29.9%), ‘고향에 대한 그리움’(27.7%), ‘남편과의 성격 차이’(11.5%)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풍습에 관한 교육’(38.1%), ‘요리’(29.9%), ‘기술교육’(27.8%) 등이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전남 공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아동 19명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을 조사한 정은희(2004)의 연구에서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회적 지원 사항을 알아보는 문항을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11%), ‘전통문화나 요리강습의 요구’(11%), ‘언어교육’(11%), ‘영주권 및 선거권 인정’(11%)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그 외 ‘동사무소나 시청 등으로부터 생활혜택에 관한 정보제공’(5%), ‘지역신문

7) 석사논문들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교포 여성에 대한 연구(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민가영, 2004)등이 혼인이주과정과 이들이 적응 및 갈등의 경험을 사례를 통하여 다루고 있다.

배달' (5%),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5%) '한국문화안내' (5%)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적은 사례수와 조사 대상 인원 중 21%가 응답을 하지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국제 결혼한 여성들에게 절실한 사회적 지원이 어떤 것들인지는 엿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 외에 여성 이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한 각종 워크숍이나 심포지움, 세미나, 토론회 등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우선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숍』(2003)에서는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충격', '정보 소외로 인한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부족' 등이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어려움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주관으로 열린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에서 이금연(2003)은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① 언어습득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② 가정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 ③ 사회시스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④ 정보소외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사회 참여 기회의 어려움, ⑤ 사법권 및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⑥ 귀화 시험의 어려움, ⑦ 문화적 갈등, ⑧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⑨ 기타 사설알선업자들의 여권 압류 및 감시 등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움(2004)에서는 '가정폭력(상습적 구타)',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경제적 빈곤의 문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국 사회 적응문제', '임신·출산의 어려움과 육아문제',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몰이해(제3세계 여성들이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다)', '체류문제와 관련한 신분상의 불안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전국적 실태조사는 비교적 최근 1~2년 간에 진행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국제결혼 여성을 대상⁸⁾으로 하였던 설동훈 외(2005)의 조사에서는 빈곤⁹⁾과 의료보장¹⁰⁾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이나 상담소, 읍·면·동 사무소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의료보장서비스

8) 전국적으로 1,082명의 국제결혼 배우자를 조사.

9)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었음.

10)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중 어떤 의료보장도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23.6%이었음.

이용의 장벽 제거, 가정폭력의 경험 및 불안정한 결혼 상태 등에서 기인하는 정신·심리적인 치료와 상담서비스, 그리고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동훈 외의 또 다른 연구(2006)에서는 외로움(22.3), 문화차이(14.6), 자녀문제(13.8%), 경제문제(12.1%), 언어문제(11.5%), 가족갈등(3.5%), 주위의 시선이나 태도 등을 의식하는 것(3.1%), 음식이나 기후(3.0%) 등이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조사에서 결혼 이주민들이 실제로 체험한 정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두 번째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한국어 교육’과 ‘취업교육·훈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다음으로 ‘컴퓨터·정보화 교육’이었다.

정기선(2007)의 연구는 비록 경기도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외국인 부인의 서비스 욕구로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가장 원하는 서비스로 ‘한국어 교육’이, 다음으로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훈련 및 교육’과 같은 고용관련 서비스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동거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행연구 및 발표 자료들, 그리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제결혼 여성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언어교육, ② 인권침해(가정폭력 포함)해소, ③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교육, 상담, 알선 등), ④ 문화 교육, ⑤ 빈곤해소, ⑥ 의료보장, ⑦ 임신 및 출산,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한 서비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Ⅲ. 사회복지법에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권리 및 급여, 지원 내용

1. 사회보장법 체계에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지위

우리나라 헌법의 생존권 이념을 반영하고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의미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법 제8조)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권이 관련 하위 법률에 따라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수급권은 ‘모든 국민의 법적 권리이다’(법 제9조)로 규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국민, 즉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제8조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되어 상호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인(제8조)에게 사회보장제도 관련법들의 규정 내용에 의하여 권리자격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내국민으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고, 사회보장법의 하위 법률들이 내국민에게 규정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여성의 모국이 한국과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나 협약을 맺은 경우로 사회보장수급권이 한정되며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 법률인 개별 사회복지법- 예컨대,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과 같은 개별 법률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적용 규정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 발생 여부가 결정되고, 두고 있는 경우 어떻게 두고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서비스의 내용들이 결정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로(법 제3조) 규정하고 있다. 이들 중 외국인 적용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들은 <표 1>과 같다. 사회보험법 중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이 외국인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며, 공공부조

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모·부자복지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등이 외국인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표 1> 사회복지법상 외국인 적용규정 여부

구 분	법률 명	외국인 적용 규정 있는 경우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입양촉진특례법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등편의증진법	
복지 관련법	건강가정기본법	

각 법률에서 외국인 및 국제결혼 이주민에 대한 적용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법

경제활동 계층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를 제공하는 국민연금법은 1998년에 개정되면서 외국인 적용조항을 두었다. 제 102조의 외국인 적용 조항 규정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체류자격에 있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들은 국민연금법의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 85조의 2,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그리고 이러한 예외조항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들도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¹¹⁾.

국제결혼 여성이주민들의 경우 국적 취득 전 체류 자격이 주로 국민배우자(F-2-1)인데 이 경우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이 취업을 하여 독자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고, 이 여성의 모국이 한국과 국민연금에 대한 상호협정 체결이 이루어져 있으면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기선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경기도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외국인 부인의 사대보험 가입률은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가입률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저소득층일수록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 2005년 현재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으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이 다 가능한 나라는 중국, 일본,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이며, 베트남과 몽골은 사업장가입자로만 적용이 가능하다.

2) 국민건강보험법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 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법은 제93조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법령 제 93조의 2항, 동법시행령 제 64조)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체류자격별¹²⁾로 구비 서류, 즉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행규칙 별표 8)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경우 국적취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재정적 여건만 갖추어지면 적용이 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정보부족과 빈곤 때문에 조사 대상 응답자 중 71.6%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3) 고용보험법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인 고용보험법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3조 4항에 외

12) 문화예술(D-1)은 재직증명서, 유학(D-2)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산업연수(D-3) 연수계약서, 소득명세서 등 소득증명가능서류, 일반연수(D-4)연수·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취재(D-5)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소득명세서 등 소득증명가능서류, 종교(D-6) 파송명령서와 소득명세서 등 소득증명가능서류, 주재(D-7)와 기업투자(D-8) 파견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소득명세서 등 소득증명가능서류, 무역경영(D-9)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명세서 등 소득증명가능서류, 교수(E-1)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와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 증명가능서류, 회화지도(E-2)와 연구(E-3) 고용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증명가능서류, 기술지도(E-4)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증명가능서류, 전문직업(E-5)과 특정활동(E-7)은 고용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증명가능서류, 연수취업(E-8)은 연수취업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증명가능서류, 비전문취업(E-9)는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증명가능서류

국민 근로자의 경우에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 체류자격자(단 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②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단기취업(C-4),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내향선원(E-10)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
- ③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단기취업(C-4),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내향선원(E-10)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
- ④ 체류자격 거주(F-2) 중에 국민 또는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및 난민인정을 받은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
- ⑤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와 외교(A-1), 협정(A-3)자격 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자
- ⑥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

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⑦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따라서 국적 취득 전 결혼 여성이주민의 경우는 ④의 국민배우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국내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다른 내국민과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발생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5년 12월에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였다. 2007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일부 혹은 전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 하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동법 제5조의 2) 규정하였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2006년 3월 24일부터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긴급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생계 및 의료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의료지원은 그간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만을 대상으로 무료진료가 시행되던 것을 결혼 여성이주민에게도 확대하여 복권기금으로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 병원 6개소, 시·도인증기관 17개소에서 1인당 500만원이내 입원 및 수술비를 지원받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의 변화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민간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설동훈 외(2005)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 방안』실태조사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빈곤상태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이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이주민만으로 제한되는 것이어서 생활이 어려운 내국민여성들이 자녀의 양육과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최저 생활보장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외국인이지만 한국 국적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근거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여타의 외국인 지위와 다소 다르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5) 모·부자복지법

모·부자 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부자복지법은 2006년 12월에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제5조의 2)을 신설하고, 2007년 3월에 시행령 제10조에도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였다. “제5조의 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모·부자복지법)

“제10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모·부자 복지법』 제5조의 2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모·부자복지법시행령)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의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이주민 중에서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㉔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는 생계비나 아동양육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관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과 같은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보호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내국민 여성과 동등하게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아동의 ‘모성’이라는 지위가 이들을 다른 외국인들과 구별 짓도록 만드는 특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서는 외국인 여성 지원 시설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시설은 외국인여성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3개월 [‘성매매 알선 등 해위처벌에 관한 법’ 제11조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규정인 외국인여성이 성매매 피해자로 수사되고 있는 경우 그 해당기관] 이내의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5조의 1항 3호). 그리고 이 시설을 2006년 3월 30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에 우리나라에 성매매 외국인피해자를 위한 보호소가 2곳(안산, 창원)이 개소되었고, 2006년에 1개소(서울)가 추가되어 현재는 3개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조항의 내용에는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달리 구별하지 않고 외국인 여성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7)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서도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보호 시설로 외국인 보호시설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7조의 1항의 2호). 이 시설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데, 현재 천안과 인천 2개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시설들은 언론매체나 시민단체, 연구조사 등에서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이주민들이 상습적인 구타와 폭언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리게 되면서 마련된 조치이다.

이주민 대상 NGO단체들이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들 기관의 여성결혼이주민 내담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보고하고, 2002년 광주여성발전센터가 광주와 전남지역의 국제 결혼한 여성 100명을 조사한 결과 30%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고, 특히 이들 중 57%는 폭행, 18%가 폭언, 12%가 경제적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실질적으로 여성결혼이주민 가족의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5년 한국의 이혼은 128,468건으로 전년 139,365건에 비해 10,897건 감소하였던 것에 비하여 외국인과의 이혼은 4,278건으로 전년 3,400건에 비하여 878건이나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이 전년대비 2.5% 증가하여 1,834건이었던 것과는 대조되게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2,444건으로 전년대비 51.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통계청, 2006). 물론 이러한 이혼의 원인이 전적으로 가정폭력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한국 남성의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 등이 원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8) 복지 관련법: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률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5조 2호).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외국인 가정이나 국제결혼여성가족에 대한 특례 규정은 없지만 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을 한국 가족의 한 단위 구성체로 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여금 이들의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문화이해 교육 및 정보화 교육, 가족생활상담 및 정보제공, 자녀보호, 결혼이민자자조집단 육성 지원, 다문화 사회 수용분위기 조성, 관내 결혼이주민 자원 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가족부의 주관 하에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2006년에 전국 21개소 설치 운영되고, 2007년에 17개가 증설되어 현재 전국에 총 38개소의 센터들이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관, 사회복지법인 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보장법들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현행 사회보장법 체계에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국적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지만 그 이전까지는 외국인 특례 조항으로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지원되는 내용들은 전국 실태조사와 NGO단체들이 이주민의 한국 생활 적응에 문제가 된다고 제기한 서비스들이다. 그리고 이를 관련되는 사회복지법에서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체계에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일관된 법적 보호의 원인은 내국민의 ‘배우자’와 ‘모성’이라는 특수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과 관련한 법들에서는 내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보호 권리가 발생하며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관련 법들에서는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의 권리가 발생한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가치는 개인의 존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여 국민가족을 유지하는 수단성에서 기한다.

2.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2006년 정부가 국제결혼 여성이주민들을 위하여, 엄격히 말하면 국제결혼 여성이주민 가정을 위하여 수행한 지원 사업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지원은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상담 서비스, 그리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출산과 자녀 양육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들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긴급의료지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근거를 두고 지원된 사업이다. 노동부의 사업들은 일차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국제결혼 여성이주민까지를 포괄하게 되었고, 기타 교육부와 문화관광부의 사업들은 국제결혼 여성이주민과 이들 가정의 한국인 자녀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응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하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2006년 4월에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으로 사업들이 확대되었다.

<표 2> 이주민가족지원 사업현황

구분	여성가족부	기타 부서
실태조사	2006년 실시	-
상담 및 교육	-교육지원: 한국어·가족·다문화 이해·정보화·직업교육, 방과 후 학습 지원 -사회적응지원: 친정어머니 및 후원가족매칭 - 상담지원: 심리상담, 부부문제	-교육부: 학습지원 -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상담·교육 -문화관광부: 문화가이드북발간, 한국문화교육체험교실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출산 및 육아관련	출산 전후 가사도우미	보건복지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지역공동체 다문화 교육	교육부: 다문화시범학교
가정폭력피해지원	의사소통상담(1366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긴급의료지원	-	보건복지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이주민가족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지원 사업 단체·기관보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여성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안전망지원센터 -이주노동자건강협회(민간)

출처: 고정화 의원 대표 발의, ‘이주민가족의보호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 2007년 3월 8일 발의 안 자료¹³⁾, p.16.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6년 천안시가 여성결혼 이민자들을 위하여 수행한 사업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자녀 국어교육실시(학습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미용기능사교육’, ‘국제결혼가정 전통혼례’, ‘국제결혼가정 전통예절 보급’, ‘외국인 여성다도교실’, ‘국제결혼가정 자녀 2명 이상이 참여하는 방과 후 교실을 지원하는 사업’, ‘국제결혼가정자녀 및 이주여성 한복기증운동’, ‘국제결혼페스티벌’ 등이었다(박미숙, 2006:105~115).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지원 사업이나 서비스들이 정부의 여러 부처, 여성가족부, 교육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국어교육원 등에서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체험, 상담, 자녀의 학습 지원과 같은 사업들로 제한되어 있다. 앞 II-2절에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들의 필요 서비스로 제기된 빈곤이나 의료보장, 취업관련 서비스 등은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도 결혼 여성이주민에게 한국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배우도록만 구성되어 있고 이들 여성의 국민배우자와 가족들이 부인의 출신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지원 사업들로는 다양한 인종들 간의 갈등과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문화, 다인종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V. 다문화가족지원법(안)과 이주민가족의보호및지원등에 관한법률(안)

현행 사회보장법 체계에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다문화 주체들, 즉 결혼이민자, 새터민, 혼혈인, 이주민노동자, 난민들의 한국사회 통합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현재

13) 각 부처의 세출예산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재작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안)¹⁴⁾’과 ‘이주민가족의보호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¹⁵⁾(이하 이주민가족지원법안으로 부름)’이 논의 중에 있다.

우선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준비가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의 내용

법제정의 필요성	-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도 보편적 인권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
법의 적용 범위	-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의 문제는 다른 법률에서 다루고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결혼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으로 한정
법의 기본 방향	- 동화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문화주의를 가미
법의 기본 이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제도, 여건 조성, 필요한 시책마련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여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 1항에 규정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 이를 위한 실태조사 3년마다 수행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이해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생활정보제공 -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가정폭력 방지 노력 등을 수행 - 아동의 보육 및 교육 -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법률상담 프로그램)
지원 및 서비스 전달조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센터,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기타 외국 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들을 지정)
기타	- 사실혼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 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규정과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규정 준용

14) 국회 인권정책연구회(대표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추진중인 내용, 공청회를 개최하여 내용의 일부 수정 등을 검토 중인 법안.

15)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의원)이 공청회를 거쳐 현재(2007년 3월) 국회에 대표발의를 해 놓은 상태임.

이에 비하여 한나라당의 고경화 의원이 주축이 되어 마련된 ‘이주민가족지원법(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이주민가족의보호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 내용

법 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결혼 등의 이유로 크게 증가한 국내 이주 외국인들에게 종합적이고 일관된 국가차원의 이주대책 마련의 일환 - 한국내 이주민가족들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지원에 대한 일관적 체계 마련
법의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보호 및 지원하고 모성과 아동을 우선으로 함 - 결혼이주민, 이주근로자, 난민, 혼혈인, 재외국적 동포 등 다양한 이주민에 대하여 취업, 근로 상황을 제외한 사회·경제·문화 등 생활전반에 대하여 보호와 지원
법의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가족의 신속한 적응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건강가정정책에 포함하여 검토, 연구,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 1항에 규정에 의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지원정책의 심의·조정 - 실태조사 3년마다 시행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사회조기적응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지원 - 이주민과 이주민가족 사회적응을 위한 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 교육, 다문화교육, 사회통합교육제공 - 이주민여성 및 모성보호에 대한지원¹⁶⁾ - 이주민 자녀에 대한 보호(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의 적용에 차별 받지 않도록) - 이주민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 가정폭력 피해,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모·부자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동등하게 적용 - 긴급 의료지원 및 구호조치
지원 및 서비스 전달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가족지원센터 - 중앙이주민가족지원센터(정책개발, 서비스지원과 조정, 콘텐츠 개발 등의 역할 수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혼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 있어 상담교육프로그램 규정과 긴급의료 지원 및 구호조치 규정준용

16) 이주민 및 이주민가족의 요청 시 출산도우미파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분만 등 출산에 필요한 지원, 불법적인 이주민으로 강제퇴거, 보호조치, 강제출국의 조치 경우에도 이주민

<표 3>과 <표 4>를 비교하면 두 법안에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주민들의 고용과 근로에 관한 부분들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가족을 단위로 보호와 지원이 제공된다는 점, 주요 정책의 추진에 있어 건강가정기본법의 실행에서 핵심적인 기구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 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한 점, 아동에 대한 보호와 서비스 제공, 명칭은 다르지만 서비스를 전달하는 독자적인 기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두 법(안)이 가족을 단위로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은 한국에 혼인이나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된 결혼이민자 가족과 귀화 허가를 받은 가족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이주민가족지원법(안)’은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하거나 귀화·혼인 등을 통하여 국적 등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적 동포, 난민 등으로 그 대상 범위를 조금 더 넓게 규정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대상자들을 한국사회에 동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문화주의를 가미하고 있어서 지원 내용들이 ‘동화’를 기본 축으로 하는 교육이 주를 이루는 것에 비하여 ‘이주민가족지원법(안)’은 다문화 교육의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민가족지원법(안)’은 모성이나 아동보호에 있어 내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장법들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아동복지법」을, 모성을 위하여 「모·부자복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규정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이러한 법률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주민가족지원법(안)’이 관련 법안들과의 유기적 관계의 설정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독자적인 성격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은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에게 생활 및 법률 상담의 제공(주로 혼인,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자녀와 부모의 강제분리금지, 임신한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출국준비기간부여 등을 세부적으로 열거.

비하여 ‘이주민가족지원법(안)’은 긴급의료지원 및 구호조치를 규정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법률(안)은 국내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이 생활의 장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한국 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행의 사회보장법 체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두 법(안)이 다문화 가족 문제를 우리 사회의 특수하게 형성된 가족의 문제로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으면서도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출생, 문화나 민족의 상이성 등 다양성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다문화주의가 강조되기 보다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동화를 전제로 한 적응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또한 두 법(안)은 개인의 보편적 인권의 추구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를 법(안)내용에서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다문화 주체들이 개인으로서 그 존엄성을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안)의 실제 지원 내용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되어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하나의 내실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VI. 결론

본 논문은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현행 법(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들 법(안)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원 체계는 현행 사회보장법 체계를 중심으로, 즉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 관련법을 대상으로 이주민, 특히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법적 권리발생의 지위와 지원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사회보장법에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지위는 이원화되어 있었다. 국적을 취득하면 내국민으로서 권리와 보호가 제공되고, 국적 취득 전에는 ‘외국인 특례조항’으로, 즉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회복지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권리 발생의 전제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국민의 ‘배우자’라

고 하는 지위와 ‘한국인 자녀의 모’라고 하는 특수한 지위였다. 사회보험과 관련한 법률에서는 내국민의 배우자 자격이,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관련 법률에서는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급여나 서비스 지원의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지원 되는 내용도 그 간의 실태조사와 NGO단체들이 이주민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던 급박한 급여와 서비스를 편의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제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제한적이면서 단편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안)’과 ‘이주민가족의보호및지원등에관한법(안)’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법안도 여전히 이민자의 문제를 가족 정책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어 다문화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권리나 가치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그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체들 간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교육이나 서비스의 장의 마련이 지원 내용에서 부족하였다.

우리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통합이란 명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회적 통합이 주류의 입장에서 진행된다면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게스트일 뿐이고 대상일 뿐이다. 최근 프랑스의 이주민 이삼세대의 소요사태는 동화주의 정책의 미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미국의 melting pot도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이미 지켜보았다. 따라서 미래의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 법안은 다른 나라들이 보여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사회가 우리의 현실이므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과 달라질 세계에 대해 적응하고 쇄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법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기에서 논의된 두 법(안)이 진정으로 ‘다문화의 개개 주체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이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로 서로 조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제4권 2호, 61~80.
- 김민정(2003).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한국남편’ 되기. 제35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민경자(2003).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003~8 연구보고서.
- 박미숙(2006). 천안시 결혼이민자가족 정책.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2006년 추계학술대회 ‘결혼이민자가족의 현황 및 사회적 지원방안, 발표 자료집, 2006.11.10.
- 박종삼(1983). 한미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의사전달 갈등의 임상적 고찰: 사회사업 치료이론 정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권, 1~13.
- 박현정(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 결혼한 이주 여성 실태보고. 광주여성의 전화부설 광주가정폭력상담소.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자료, 2004년 12월 30일, 광주여성의 전화 2층 교육실, 1~46, 85~99.
-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2006). 2005 출입국관리통계연보
- 서영주(2001). 강원지역 외국인 주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강원도 여성정책실. ‘외국인 주부 복지증진을 위한 토론회’ 2001년 9월 7일 춘천, 21~75.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 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
- 설동훈 외(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2003)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운동, 1992~2002년. 김진균 편,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 한국 사회운동의 흐름과 지형. 서울: 문화과학사(1998).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성지혜(1996). 중국교포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1974).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미8군 정신위생과에 의뢰해 온 미국군인배우자를 가진 한국여성을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철호 외(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6집, 127~149.
- 윤향숙(2004a).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외 엮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321~349.
- _____(200b).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10월 심포지움 발표논문, 1~25.
- 이금연(2004).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 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센터, 2003. 6. 4 국가인권위원회 21~44.
- _____(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대전포럼(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2003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집. 국경과 인종,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평등과 연대를 향해, 충남여성개발원, 2003년 11월 6~7일.
- _____(2001). 국내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미간행)
- 이윤애(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이주·여성인권연대(2001). 국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족의 문제와 대책. 이주민가정. 새터민가정의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 '이주민가정과 아동의 보호관점에서의 이주 노동자 정책 방향 모색', 2006. 6. 7, 국회의원 회관 901호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73~106.
- 위험(안양전진상 복지관 이주여성센터 위험)(2003).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2003년 6월 4일. 국

가인권위원회.

외노협(2001). 외국인 노동자 보건·복지향상을 위한 토론회.

정기선 외(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제13권 제3호, 33~5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2003).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숍. 통계청, <http://kosis.ngo.go.kr>, 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염(2007).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토론회-참여정부 4년,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주관 2007년 2월 22일 만해NGO센터.

_____ (2006).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원원전략은 가능한가?.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정책 “다시보기”. 자료집, 2006.6.12.

_____ (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2004. 11.26.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움 자료집.

_____ (2004). “이주의 여성화와 성산업현장의 이주여성,” “국내거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과제,”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시스템과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제언,” 이주 여성센터 (<http://www.wimgrant.org>).

_____ (2003). 국내거주 이주여성노동자를 통해 본 인종차별주의. 한국여성신학, 제52호.

Charles Hirschman, Josh DeWind, and Philip Kasinitz, eds.(1999).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NY: Russell Sage Foundation.

Hondagneu-Sotelo, Pierrette(2003). *Gender and U. S. Immigration*.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im, Bok-Lim C.(1972). Casework with Japanese and Korean Wives of Americans. *Social Casework*, 53(5): 273~279.

- IOM(2003a). World Migration Report 2003. IOM. Geneva.
- Jolly, Susie(2003). Gender and Migration in Asia: Overview and Annotated Bibliography, Reg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Development and Pro-Poor policy Choices in Asia*, 22~24 June 2003. Dhaka, Bangladesh.
- Lee, Daniel B.(1981). *Military Transcultural Marriage: Reserarch Findings*. A paper presented at the Department of Army Behavioral Science Conference, El Paso, Texas.
- O' Rourke, Kate(2002). To Have and to Hold: a Postmodern Feminist Response to the Mail-Order Bride Industry. *Denver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30(4): 476-497.
- Perez, Beverly Encarguez(2003). Woman Warrior Meets Mail-Order Bride: Finding and Asian American Voice in the Women's Movement. *Berkeley Women's Law Journal*, 211-236.
- Schaeffer-Grabiel, Felicity(2003). *Cyber-brid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Transnational Imaginaries, Migration, and the Intimate Economy of Marriag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 Simons, Lisa Anne(2001). *Marriage, Migration, and Markets: International Matchmaking and Internatonal Feminism*.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 Thai, Hung Cam(2002). Clashing Dreams: Highly Educated Overseas Brides and Low-Wage U.S. Husbands. In Global Woman: Nannies. *Maid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Edited by B. Ehrenreich and A. R. Hochschild. New York: Metropolitan Books, 230~253.
- Wang, Hong-zen and Shu-ming Chang(2002). The Commod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Cross-border Marriage Business in Taiwan and Viet Nam. *International Migration*, 40(4): 93~116.

- Yu, Kojima(2001). In the Business of Cultural Reproduction: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Mail-Order Bride Phenomen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4(2): 199~210.
- Yuh, Ji-Yeon(2002). *Beyond the Shadow of Camptown: Korean Military Brides in America*. New York: New Work University Press.
- United Nations(2004). *International Migration 2002*,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New York, USA.

A Exploratory Study on the Social Support System for Marriage Immigrants Women: Laws of Social Security and Tow alternative Laws for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to be Enacted

Soonyoung Moon*

With globalization, the number of individuals that are traveling, working, or studying abroad is rising globally, and so i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Utilizing secondary data of previous studies, the study aims at explore how social support system is for the immigrants women by marriage, which mainly focused on laws related social security acts; and finding out implications, problems, and providing suggestions of two alternative acts which to be enacted to help their stable settlement and adjustment in Korean societ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is not such an comprehensive adequate social support provided by present laws of social security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are risks in Korean life, except minimum cost of living, maidcaid, and a few domestic violence shelter. Second, The rising awareness of comprehensive social support system for them has brought two different ‘social support act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y are now open to public discussion and verification before approving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weakness of those two acts is the ideology intent to be multi-culturism, but provisons and substances of the two acts do not refect ideology, it rather emphasis one-sided assimilation.

Key words: multi-cultural, immigrants women internationally married, social support, laws of social welfar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Baekseok College of Cultural Studies